

정보화에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달려있다

시작단계의 지역종합정보화 구축

정보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는 80년대로서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마인드확산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90년대 부터 각 분야별 연구활동 및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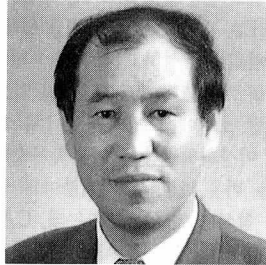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정보화는 정보통신부의 주관하에 지방체신청을 통하여 '94년 총 18개소의 지역정보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역정보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소재 대학, 교육청, 지방상공회의소, 농협, 농촌지도소 등 공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 장비 일체를 지원하고, 구체적 개발사업은 한국정보문화센터(ICC)가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정보화는 광역시, 도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보화는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의 내용이 미약하다. 대부분 관광정보, 주민등록업무, 토지관리업무, 세금관리업무, 자동차관리업무, 농·축·수산업무 등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지역종합정보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선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정부 효율적 경영위한 정보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제 우리



김 구 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지방정부도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선진국들의 주요 도시와 당당히 겨루기 위해선 정보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즉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지방으로 분산, 보급시켜 전국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정보화사회에서 한 걸음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보화는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는 국가경쟁력확보의 주요수단으로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의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국가의 총체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은 새로운 개념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21세기 단일경제권하의 주도권 쟁탈을 위해 정보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국가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에는 정보기술로 인한 변혁이 산업외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게 되며, 정보·지식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미래 정보·지식산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아직 정보화 기반 및 행정전산망 사업의 추진이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분의 정보화 사업을 조기에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통신망 구축을 확대하여 지방행정 서비스는 물론 주민행정 위주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아울러 정보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한 최선의 과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지만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화로 인해 적절한 재정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기업가적 안목과 경영자적 기법을 개발하여 지방경영 그 자체를 하나의 전문적인 사업으로 생각

해야 할 때가 왔다. 즉 지방의 특색을 살린 행정서비스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은 지방재정의 자립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재정업무의 전산화이다. 향후 21세기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더불어 재정관리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지방재정업무 전산화가 지방정부에 확대·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광역화,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대응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조직을 재편성하거나 주민행정수요를 찾아내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농업행정을 주축으로 한 1차산업 위주에서 2, 3차 산업 및 지역정책, 지역개발, 지역정보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지방행정조직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지방화시대 지방행정의 새로운 경영기법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지방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시장정보, 가격정보, 상품정보, 투자정보, 개발정책 등에 숙련 수범하여 앞장서 나갈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자본을 유지하는 등 새로운 경영기법으로서 기업가적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규제와 간섭 위주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민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공개행정과 현장행정을 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미래정보·지식산업의 고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역산업의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적인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역정보화가 필요하다. 지방에서도 창업 또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 무역, 금융, 통신, 정보, 연구개발 등 산업지원서비스 및 기술지원기능을 확충하고 산업기술인력의 현지양성 및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기능의 강화와 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보서비스 혜택 골고루 돌아가도록

지방자치시대 지역정보화의 성공 여부는 지역간 격차의 사전예방과 지역간 균등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에 달려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정부가 특색있는 지역개발계획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자체적으로 실천토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개발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해당지역과 관련되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지방에서도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지만, 국가계획과 연계 및 세부실천계획의 결여로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이론적인 청사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거점개발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정보서비스 등을 지방정부에도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적 개발의지를 바탕으로 지역내 축적되어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조직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능을 분담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건의를 받아 이를 총괄·조정하여 국가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정부는 국가계획과 조화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즉 중앙정부는 도시계획, 지역계획 등 개발계획의 기본방향과 원칙적인 사항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입안과 실행은 지방정부가 관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국가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개발계획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경쟁적으로 무분별한 분출이 예상되는 지역개발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확충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